

혁명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
자본주의 철폐!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혁명당 건설!
노동자권력 쟁취!

■ 발행일 : 2012년 12월 7일(금)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블로그 : 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노동자대통령 선투본’인가?, ‘정권교체’인가?

지금 노동자계급, 더 직접적/구체적으로는 운동진영 앞에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 vs ‘노동자대통령 후보 선거투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서 있다. 지금 와서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운동진영 내에서 수많은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운동진영 내 정파(세력)나 개인은 없다.

사실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는 앞선 4월 총선에서 절정에 다다랐다. 진보정당, 민주노총이 합심해서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를 위해 총력을 다 했다. 그 때까지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헛기세라도 부릴 수 있었다. 그 뒤 통진당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한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굳이 말한다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어쨌든 ‘진보정당’이 무대에서 사라졌으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문/안 선거캠프로 달려갔다. 즉 자본가정당에게 아예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 대선정국에서 민주노총은 개점휴업 상태다. 심상정후보는 등록을 포기하고 자본가정당에게 통째로 자진 헌납했다. 이정희후보는 TV토론에서 ‘박근혜 저격수’로 자처하고 나섰다. 이게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가 다다른 현주소다.

다른 한편 ‘선투본’도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 입장을 반대하는, 그 연장에서 후보전술에 동의하는 운동진영을 망라하여 구성, 출범하지 못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된 대표적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완주 문제였다. 현 ‘선투본’에 결합한 주체는 완주를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물론 노혁추는 완주는 전제이자, 출발일 뿐 그 자체가 목표일 수 없으며 대선투쟁의 목표와 과제는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지 완주만으로는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를 반대해야 하는 실질적인 근거와 그 뒤로 이어질 정치적 전망과 행보를 제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후보 사퇴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현주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던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열어두는 것이 현재와 같은 지형이 펼쳐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즉 ‘사퇴’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현실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과 전망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퇴’를 열어둔다면 그 효과는 밖(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열어두고 시작하면 오히려 지금의 ‘선투본’조차 만들기 어렵다고 보았다. 물론 꼭 ‘완주’만 문제였던 것은 아



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은, 각 세력마다 중시/강조하는 것이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완주 만큼의 비중을 갖는 다른 차이는 크게 없었다.

어쨌든 실제로 ‘선투본’이 갖는 객관적 한계는 위 내용을 포함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완주를 떠나 현재까지 ‘선투본’이 펼치고 있는 선거투쟁 양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선투본’에 결합한 주체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근거로 적지 않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선투본’이 현재 보이고 있는 한계 중, 역사적 제약을 별도로 하면, 많은 부분이 자원이 부족 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자원 부족이야말로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일단 ‘선투본’을 성립/현실화시킨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적어도 대선정국 아래에서는 ‘선투본’이 운동진영 내에서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 세력에 대항하는 현실적인,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를 반대하는 세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투본’을 강화하는 데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 즉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 vs ‘노동자대통령후보 선거투쟁’ 중 어느 입장을 강화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인 주장과 행위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정희후보는 아예 노골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박근혜 떨어뜨리기’라고 만천하에 천명함으로써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속류화, 타락시켰다. 자본가정당의 이중대(들러리) 차원을 넘어 자본가정당의 뒷꿈무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지금 현실에서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를 이끌고 있는 세력은 문재인/안철수 세력이다. 이들은 오히려 이정희후보를 떼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동안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를 아무리 진보정당/민주노총이 절대적으로 앞장서서 주장하고 이끌어왔다 해도, 또 지금까지 그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하고 반대한다고 해도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가 진보정당/민주노총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즉 그들만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다. 진보정당/민주노총의 입장과 명백히 다르다고 해도 ‘야권연대/

후보단일화/정권교체’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 세력(정파), 개인들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이제까지 존재했던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의 물적 기반과 운동적 의미는 이전과도 또 다르게 변했다.

이는 분명 변화된 정세다. 달라진 지형이다. 심상정/이정희/민주노총이 그동안 말해왔던 정도의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조차 더 이상 현실에 없다. 그와 함께 심상정/이정희/민주노총의 왼쪽에서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를 사실상 용인했던 정파(세력), 개인의 마지막 근거도 사라졌다. 이렇게 되도록 만든 주역은 심상정/이정희/민주노총이다. 그렇더라도 심상정/이정희/민주노총이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들 노동자가 아직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지금도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를 용인하는 것은 그들 노동자를 붙잡기는커녕 문재인/안철수 세력에 갖다 바치는 것을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87년 이후 형성된 최소 수준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의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심상정/이정희/민주노총의 개량주의 관료지도부에게 사실상 굴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전술의 차이라고 할 수 없다.

현실의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가 말한 대로라고 해서 그것이 곧 ‘선투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저절로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실의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가 만약 말한 바와 같다면 이제는 분명하게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그에 따르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를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해 말해야 한다. 심상정/이정희/민주노총 뒤에 숨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선투본’은 분명 단일체가 아니다. 또한 ‘선투본’ 이후에 펼쳐질 운동/조직 전망도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말했듯이 ‘선투본’은 현 대선정국에서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에 대항하는 운동진영 내의 실체다. 가장 최소한으로 말한다고 해도 ‘투표전술’의 대상이다. ‘선투본’에 결합해 있지 않아도, ‘변혁모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도, 대선 이후의 운동/조직 전망을 큰 틀에서 ‘선투본’ 또는 ‘변혁모임’과 다르게 구상하고 있다고 해도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것들과 무관하게 ‘선투본’에 대해 지금 정세에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는지를 자신의 조직원과 지지자들에게, 노동자계급에게 늦지 않게 밝혀야 한다. ‘노동자대통령 선투본’인가,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인가를.

대선 일정이 이제 불과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든 대선 이후로도 노동자투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선투본'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에 나선 또 하나의 이유도 바로 대선 이후 벌어질 정세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를 위해 '선투본'(김소연후보)은 지금 대선 정국 한복판에서 모든 힘을 다해 '선거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선투본'이라는 형식은 대선 이후 정리되었지만 '선투본'에 결합했던 주체들은 대선 이후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자투쟁에 결합할 것은 물론 노동자투쟁을 앞장서 조직하기 위한 더 많은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 확실하다. 어쨌든 '선투본'은 지금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이란 기치를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 투쟁하는 사업장, 투쟁이 필요한 현장을 중심으로 선거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시피 아직은 대선 정세를 흔들만한 투쟁을 조직하지는 못하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더 힘을 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시작한 본래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만이 남아 있다.

'선투본'은 지금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심상정/이정희/민주노총의 개량주의 관료지도부가 이미 파탄 낸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새롭게 되살리기 위해,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또 벌어지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 진짜로 자본과 국가로부터 노동자계급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를 말로만 비판하는 것을 넘어, 진보정당/민주노총의 개량주의 관료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말로만 묻는 것을 넘어 스스로 주체로 나서 행동으로, 투쟁으로, 실천으로 행하고 있다. 대안이 무엇이나고 묻는 것을 넘어 스스로가 대안이 되고자 나섰다.

'선투본'은 선거투쟁 전 과정을 통해 노동자계급이 이제 정치와 투쟁의 주체로, 대안 세력으로 직접 등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자본주의 반대', '부르주아 정치체제 부정'을 노동자계급이 거머쥐어야 할 투쟁의 정치적 방향과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래야만, 그럴 수 있어야만 현재 무너진 노동현장과 노동자계급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것만이 소수 활동가만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지금 노동현장이 무너지고 노동자대중이 움츠리고 있는 것도 바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고/비정규직/민영화/노동유연화 반대 투쟁을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향상시키고 투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과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 때문에 노동자대중의 그 술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을 막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인식과 판단에 근거해 선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만으로도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강화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설령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강화해야 할 당장의, 현실의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다. 현 시점에서 '현대차비정규직투쟁', '쌍차투쟁', '장기투쟁사업장투쟁'을 엄호/지지/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가 바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이 바로 그렇다. 지금 '선투본'의 자원만으로는 이들 투쟁을 대선정국에서 정세를 뒤흔들 정도의 계급투쟁전선으로 만들기 쉽지 않다. '선투본(김소연후보)'은 그럴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방향과 의지는 분명하다.

'선투본'은 정몽구를 넘어서고자 하고 있다. 철탑에 올라가면서 내걸은 "불법파견인정, 신규채용 중단, 정몽구 구속"을 현실화하고자 하고 있다. '선투본'은 정리해고의 상징인 쌍차 해고 노동자 복직을 반드시 쟁취하고자 하고 있다. '선투본'은 재능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선투본'은 이들 투쟁을 통해 노조탄압, 노동기본권 후퇴를 막아내고자 하고 있다. 물론 '선투본'에 직접 결합하고 있지 않은 조직/단체/개인들도 이 점에서는 '선투본'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실제 그들 투쟁에 '선투본' 못지않게 함께 투쟁하고 있다. 또한 이들 투쟁은 대선 이후로도 여전히 이어갈 투쟁이라는 것도 맞다. 그러나 지금 대선정국에서 이 투쟁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선투본'이 이들 투쟁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선투본'은 앞장설 의지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 반대 전선을 최대한 확대하는 공동의 행위

를 해야 한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의 실상을 똑바로 본다면 그것이 노동자계급에게 해악적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금의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는 박근혜가 당선되는 것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노동자계급에게는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 대안 정치 구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권교체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둔 채 투쟁을 확산하기 어렵다. 투쟁의 정치적, 계급적 성격을 강화하기 쉽지 않다.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 반대를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심상정/이정희/민주노총의 개량주의 관료지도부를 대체할 새로운 지도력 창출, 대안 정치 구심 형성하기 위한 운동과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가시화해야 한다. 지금 현실의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는 지난 총선 때의 그것보다 훨씬 타락했다는 것을 노동자계급에게 폭로해야 한다.

둘째는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에 반대하는 현장활동가들이 나서야 한다. 공식노조 지침에만 의존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의례적인 집회에 동원되는 이상으로 투쟁을 확산, 강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아래부터의, 현장으로부터의 직접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현장으로, 지역으로, 조합원에게로 '선투본'을 불러들여 '선투본'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이 같은 활동을 강화해 공식노조를 압박하고 설령 공식노조의 지침을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동의하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라도 집단행동, 직접행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침 '선투본' 활동이 갈수록 활기를 띠면서 그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창출되고 있다. 아직은 눈에 확 띄지 않지만 활동가들이 적극성을 보인다면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정도로는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 '선투본'이 상정하고 있는 12월 15일 투쟁을 꼭지점으로 삼아 현장을, 지역을, 조합원을 조직하자.

셋째는 '선투본'으로 자원과 투쟁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선투본'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럴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말했다. 즉 적어도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에 반대한다면, '선투본'이 그를 위해 선두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선투본'이 현실에서 '야권연대/후보단일화/정권교체'에 대항하는 엄연한 실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코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지금 철탑 위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투쟁 자원과 투쟁 역량을 집중해 돌파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혁명**